

## 2. 정책 동향

### □ 정책 이슈 : ‘국민과의 대화’에서 나타난 경제회생 대책

-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‘국민과의 TV대화’에서 1년간의 경제 상황 평가와 주요 현안들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향후의 경제회생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밝힘
  - 즉 우리 경제의 좌표와 방향을 밝히고 경제회생의 전제 조건, 정부의 경기부양책, 각 층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됨
- (내용) 경제회생 대책들은 경기 부양, 물가 안정, 중소기업 지원, 실업 대책, 기업구조조정 촉진, 농어촌 문제 등의 주요 부문으로 나뉨

#### < 주요 경제회생 대책의 내용 >

경기 부양	- 99년 2%, 2000년 5%대 경제성장 전망 - 상반기에 투자를 대량 집행하는 등 SOC투자 과감히 추진 - 가계자금 방출, 가계대출 금리 한자릿수 인하 - 경제회생을 위한 건전 소비 장려
물가	- 99년 3% 이내의 물가 안정 실현 - 공공요금 인상 억제, 농·수·축산물 유통망 개선
중소기업	- 중기 대출금리 연내 10% 이내로 인하 - 신용대출 확대
실업	- 공공근로사업, 대학졸업생 인턴 채용 등 단기 실업대책 확대 - 중소기업 육성, 3차산업 육성, 기술우수인력 육성을 통한 장기 고용창출 역점
기업구조조정	- 경쟁력없는 기업은 퇴출·외자도입 등으로 정리해 은행과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
농어촌 문제	- 농업유통부문 예산을 30%까지 확대 - 농산물의 제값받기 대책 마련

- (구조조정 관련 강조 내용)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리해고 필연성과 대그룹들의 적극적인 약속 이행을 강조함
  - 향후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함. 그러나 이는 기업들의 철저한 경영합리화와 최소 인력 해고를 필수적 전제 요건으로 함
  - 구조조정과 관련한 대그룹들의 대국민·대정부 약속의 적극 이행과 더불어 향후

에도 과거 관행의 근절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함

□ 정부 정책 동향 (2. 19~22)

<p>건설교통부(2.21): 택지개발촉진법 개정, 4월 부터 시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'택지환매제'를 폐지하는 택지촉진법 개정을 시행</li> <li>- 택지환매제: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된 택지를 3년안에 용도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토록 한 의무 규정</li> </ul>
<p>보건복지부(2.21): 지역·직장의료보험 보험 료 인상 방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의료보험 보험료를 3월 중 15~20% 수준에서 인상할 방침</li> <li>- 직장의료보험은 3월 중 조합별로 재정안정대책을 수립, 복지부의 누적적립금기준치에 미달하는 조합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</li> </ul>
<p>건설교통부(2.21): 그린벨트에 근린생활시설 허용, 4월부터 시행 방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'을 마련, 4월부터 시행할 계획</li> <li>· 용적률 100%, 건폐율 20% 규모로 주택을 지어 음식점·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가능</li> <li>- 개정 건축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5월 9일부터는 그린벨트내 주택의 용도변경 횟수 제한·건축물 대장 변경 규정도 폐지됨</li> </ul>
<p>문화관광부(2.19): 99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형 대중예술전문 공연장을 2001년까지 건립(올림픽공원내), 어린이도서관을 2002년까지 완공</li> <li>- 문화비전2000사업 추진, 표준국어대사전 발간사업 99년 완료, 저작권법 전면 개정 등</li> </ul>
<p>공정거래위원회(2.19):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 정, 시행 발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당지원행위 예외 인정</li> <li>· 분사화: 설립등기후 1년간 조사대상에서 제외</li> <li>· 구조조정: 기존 채무보증범위내에서의 채무인수 행위, 기존 지분율에 따른 유상증가 참여</li> <li>· 계열 분리: 계열사가 비계열사와 합병해 그룹 분리했을 경우 조사대상 제외</li> <li>- 한편 중소기업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막기위해 부당성 기준(지원금액, 자금, 자산, 인력)을 강화</li> </ul>
<p>행정자치부(2.19):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90% 상반기 발주 통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올해 지자체 진행 공공사업의 90.9%(11,605건)에 대해 상반기중 계약을 맺을 것과 9월말까지 97.9%(12,391건)의 발주 완료를 통고</li> <li>- 이를 위해 이달내에 국고보조금 1조원을 지급하고,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예산의 88.8%(14조 1,658억원)를 상반기중 배정키로 함</li> </ul>

(민 주 흥 [jhmin@hri.co.kr](mailto:jhmin@hri.co.kr) ☎724-4014)